

지방의정 브리프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의 의의 : 특례시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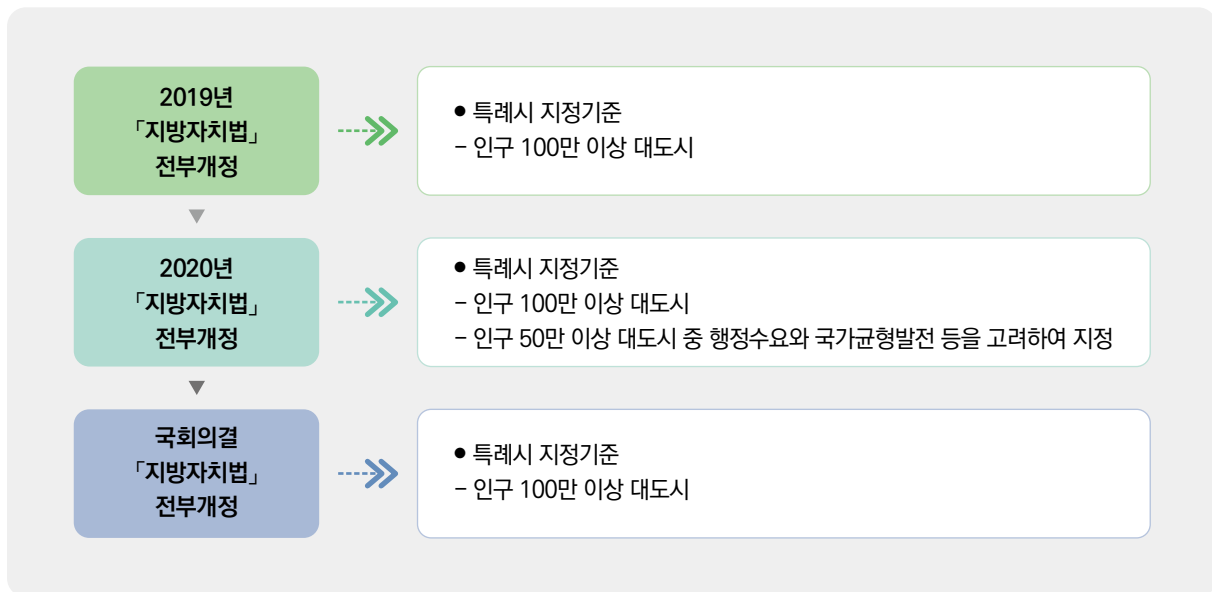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특례시의 논의경과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대응
 - 기존의 분리적 행정구역 접근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도(道)에서 분리하여 광역시로 승격하였으나, 최근의 통합적 행정구역 접근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균형발전적 접근의 요구
 -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정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단일의 인구규모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함

〈그림 1〉 특례시의 논의경과



II. 특례시의 제도내용

- 행정명칭의 부여
 - 특례시는 단순히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이 부여되는 제도로 특례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를 구분하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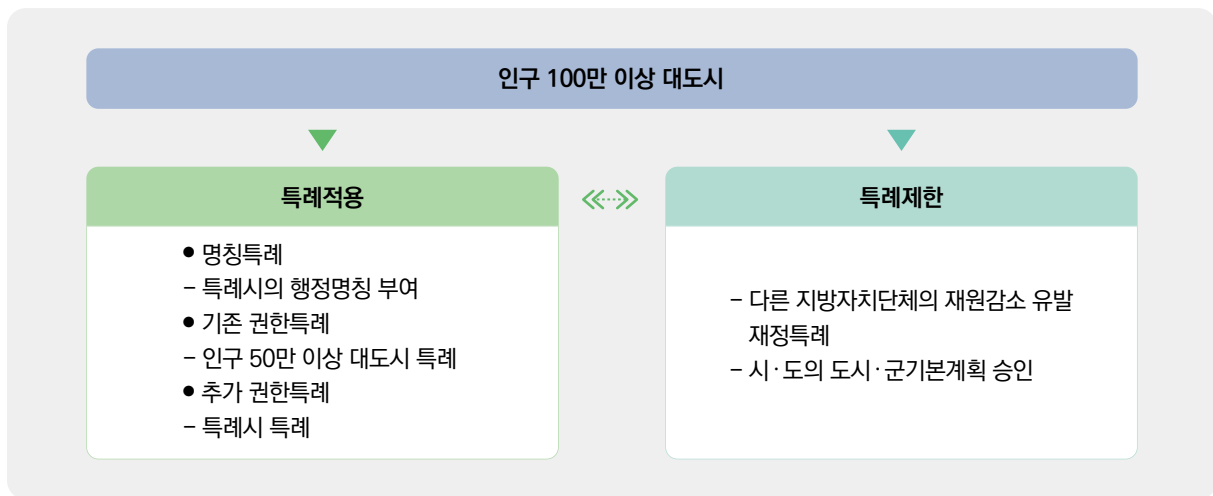
● 추가적 권한특례 부여

-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정한 종류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는 않지만, 기존에 부여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에 더하여 추가적인 특례를 부여받게 됨

● 특례부여 제한요건

-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 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의 부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에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대상도시에서 기준보조율 체계개선과 도세징수액의 교부비율 상향 및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특례시 직접교부 등의 재정특례를 요구한 바가 있어서 재정특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 특례시의 주요 제도내용



Ⅲ. 특례시의 특례부여 방향

● 특례시의 공간적 특성반영

- 특례시로 지정될 대상들이 수원시와 창원시, 고양시 및 용인시로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도농복합적 도시들로 도시적 수요와 더불어 농촌적 수요도 포괄하고 있으나, 특례시의 제도적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도시적 수요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함

● 특례시의 규모적 특성반영

-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현행의 광역시의 규모적 수준에 버금가는 도시들이므로 광역수준의 행정수요를 특례에 포함하여 특례시의 완결적 행정대응이 가능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존의 대도시 특례반영

- 기존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적용되던 특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특례시에 적용되는 추가적 특례는 기존의 특례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특례가 필요한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표 1〉 특례시 특례내용 검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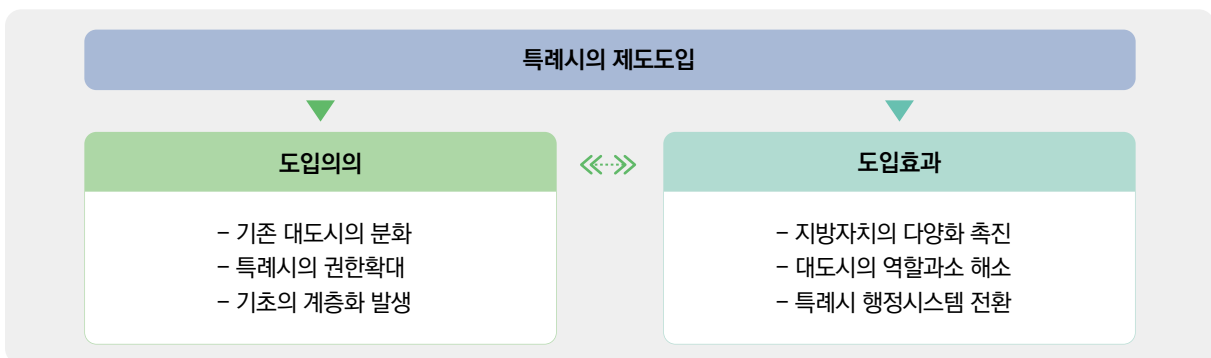
사무종류	기존특례	특례검토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 - 지적 - 지방채 - 지방연구원 설립 및 운영	검토필요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보건의료 - 지방공기업 - 환경보전 - 식품제조업 -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관리 - 사회복지시설	검토필요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주택건설 - 토지구획 정리사업 - 도시계획 - 도시재개발사업 - 건설기계관리 - 자동차운송사업 - 열사용 기자재 - 고압가스 - 도시가스	검토필요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검토필요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검토필요

IV. 특례시의 도입의의

● 대도시 행정의 실질화 확보

- 특례시의 도입으로 기존 대도시의 분화와 특례시의 권한확대 및 기초의 실질적인 계층화가 발생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기존의 대도시 역할과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권한 확대를 기초로 특례시의 행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3〉 특례시 도입의 의의 및 효과



내용문의 :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33-769-9840, gch@krila.re.kr)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pp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